민식이법 1년…스쿨존 어린이 안전 위협 여전

초교 앞 불법 주정차 몸살…인도 위 침범 등 시야 확보 안돼 '위험'

달라지지 않은 운전자 안전의식…광주 스쿨존 교통사고 되레 증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를 늘리고 보호구역 도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고 정부도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위태로운 실정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제고 뿐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절실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불안불안=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28건(사망 0명·52명 부상)에서 2019년 40건(사망 1명·50명 부상)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7건(사망 1명·61명 부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도 41건(사망 1명·부상 51명)에 달해 2019년보다 많았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관련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작 사고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 오치동 서산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1년 전 〈사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학교 담장 인근에 설치된 폭 50㎝ 가량의 인도는 전신주·쓰레기 등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생색내기' 인도였다. 인도 위까지 주차된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 인근을 지나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 담장 주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여전하고 많아 키작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조봉초교 앞 도로도 물건을 들고내리는 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위태로와 보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차량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스쿨존 내 과속차량은 지난 2018년 1만 2187건→2019년 1만 6980건→2020년 2만 2754건으로, 2년 사이 1.86배 증가했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가 사람 중심의 바뀌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모든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놔=행정안전부는 24일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도도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현재 173대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올해 안으로 106대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도 90대에서 134대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년 지나도 불법주차 그대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서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위). 1년이 지난 24일 오후 다시 찾았지만 무질서는 여전했다.

135억원대 기아차 취업 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법원 "피해자 600명…죄질 무겁다"

135억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지원자 616명으로부터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B목사에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서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500만원을,비정규직 노조원의 자녀를 취업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각하

법원 "대법 판결 따라 이미 취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24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더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주민에 식사 제공 광주시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이경호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모 숯불갈비집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이 조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교회 모임에 참석했고 업무추진카드로 식대를 먼저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측이 주최한 교회 신도들 모임에 교인으로 잠시 인사하기 위해 들렀을 뿐 기부행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식사비의 경우 해당 식당에서 장기간 선 결제를 해왔는데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3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총선 경선때 허위사실 유포 광주 남구의원 징역형 선고

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악용되기 쉽고 이용이 규제돼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25명이고 실제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경쟁자인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들인 뒤 타인 명의의 번호로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